

## 지증왕대 喪服法 제정의 배경과 지향

남 혜 민\*

- I. 머리말
- II. 喪葬 관행과 상복법
  - 1. 국왕상의 상장 관행
  - 2. 상복법 제정의 배경
- III. 집권체제의 정비와 상장례
  - 1. 귀족 관료의 서열화
  - 2. 위계에 따른 상장례 규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상복법은 상장례에 관한 예법·규범으로, 지증왕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복법을 제정하였다. 상복법은 부모·처자·국왕상에 대한 1년 복상을 규정하였으며, 상복을 입는 방식·기간은 차등적으로 나누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6세기 초, 왕정 지배층은 국왕의 권력을 정점으로 일원화된 위계 서열을 갖추었다. 그리고 신라 중앙은 지방통치를 강화하면서 지방민을 하나의 서열 체계로 포섭해나가고 있었다. 국왕권의 강화, 국호의 확정과

---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kse6231@hanmail.net

더불어 제정된 상복법은 왕경 지배층과 지방 유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이었던 것이다.

관등제를 법제화하기 이전부터 지증왕은 지배층의 정치적 위계·신분 등급이 상장례의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증왕은 상장례의 수준에 차등을 두어 지배층의 위계 서열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어 \_\_\_\_\_

지증왕, 상복법, 상장례, 집권체제, 위계, 관등제

## I. 머리말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존호를 제정하였으며, 주군제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증왕 5년(504)에 제정한 상복법도 내용 전반을 파악할 수 없지만, 제도 정비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일찍이 지증왕대 수용한 중국식 제도 중에서 상복법은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명시하는 중국적 사회편제 방법으로 언급되었다.<sup>1)</sup> 이후 지증왕이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유교식 喪制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 이래<sup>2)</sup> 상복법은 유교의 상복제 원리까지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3)</sup>

최근 상복법의 내용이 『북사』·『수서』 신라전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하면서 상복법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당시 왕실의 혼속과 상례를 관련지어 상복법은 일부일처제를 반영·제정된 것으로, 상복법이 골품제의 수립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up>4)</sup> 그리고 유교적 상장제의 도입이라는 기존 논의를 발전시켜 지증왕·법흥왕대 왕실 상장례·제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복법의 내용을 살폈다.<sup>5)</sup>

상복법에서 신라적 변용을 부각한 것과 달리 ‘법제’라는 측면에서 상복법의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상복법은 국왕과 관인층의 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제도의 하나로 설명되었다.<sup>6)</sup> 나아가 상복법의 바탕이 된 유교 가족 윤리를 주목하여 상복법의 도입은 가족

- 
- 1)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65쪽(원재 『歷史學報』 53·54, 1972).
  - 2)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2008, 6~13쪽.
  - 3)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韓國古代史研究』 65, 2012a, 48~55쪽. 이를 바탕으로 신문왕대 이전부터 중국 凶禮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채미하, 「신라의 凶禮 수용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42, 2012b, 37~39쪽).
  - 4)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2018.
  - 5) 박초롱, 「지증왕·법흥왕대 왕실 상장례 변화와 그 의미-지증왕대 상복법 제정·반행(頒行) 문제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史學』 62, 2019.
  - 6) 홍승우, 「지증왕대 喪服法과 律令」, 『歷史教育論集』 74, 2020.

윤리를 사회규범·통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sup>7)</sup>

상복법에 관한 연구는 상복법이 제정된 배경·목적에 밝히려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나 대부분 반행된 이후의 결과·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유교의 수용, 예제나 법제의 정비와 같이 일방적 측면에서 상복법을 검토하면서 즉위 초창기부터 지증왕이 상복례에 관심을 가진 이유나 상장례를 정비한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유교에서 禮는 의식·제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식·제사를 통해 실현되는 도덕규범이며, 사회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사회 규범이었다.<sup>8)</sup> 그중에서 ‘상복’은 喪을 당한 인물들이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 입는 복식 자체이자, 친소 원근·장유·존귀 등이 결합하여 服喪의 경중을 구별한 예제였다.<sup>9)</sup> 그러므로 당시 사회·정치적 상황과 지증왕의 정치적 지향을 모두 살펴보면 지증왕이 상복법을 제정한 이유·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증왕대 이후 국왕상의 喪葬 관행에 관한 기록을 통해 상복법의 내용을 일부나마 파악하고, 즉위 초기부터 지증왕이 상복법을 제정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증왕이 상장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와 상복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사회·정치적 상황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지증왕이 일련의 제도를 정비·시행하면서 상복법을 제정했던 목적을 파악하고, 상복법의 제정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은 신라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증왕대 상복법의 제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가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증왕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7) 이현주, 「신라 유교 가족윤리의 도입과 변용-상복법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59, 20 21.

8) 尾形勇, 『中国古代の「家」と国家-皇帝支配下の秩序構造』, 岩波書店, 1979, 327쪽.

9) 『예기』 「大傳」, “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 II. 喪葬 관행과 상복법

### 1. 국왕상의 상장 관행

‘상복’은 喪을 당한 인물들의 슬픔을 표상하는 服飾으로, 상례 중에 입기 시작하여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의 服喪으로 이어졌다.<sup>10)</sup> 유교에서 ‘상복’은 服을 입는 방식[喪裝]과 상복을 입는 기간[服紀·喪期]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수준은 혈연·친속 관계와 사회적 신분의 상하가 결합하여 정해졌다.<sup>11)</sup> 有服者는 각기 정해진 기간, 규정된 喪裝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복은 추모, 혈연의 친소·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가시적·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예제였다.<sup>12)</sup>

신라에서 언제부터 상복을 입는 행위를 통해 망자를 애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504년 상복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10) 『예기』 「喪大記」·「問喪」과 『의례』 「상복」의 3년상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

단계	斂襲			殯~送葬		葬後(變除과정)		
기간	당일	3일	5일			13개월	25개월	27개월
절차	復·沐浴·襲	小斂	大斂·成服	哭踊·啓殯	虞祭·卒哭	小祥(練祭)	大祥	禫

11) 상복 전반에 관한 연구는 谷田孝之, 『中国古代喪服의基礎的研究』, 風間書房, 1970 이 있다. 『예기』·『의례』를 중심으로 상복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김용천·장동우, 『中國古代 喪服의 制度和 理念』, 동과서, 2007 ; 공병석, 『예기 상례의 인문관』, 學古房, 2013 등이 있다.

12) 중국 선진시기부터 상복은 망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자발적 예제였으나 점차 가문·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고 내부의 자율적 질서를 확인하는 도덕규범으로 강조되었다(藤川正數, 『魏晉時代における喪服禮の研究』, 敬文社, 1960, 96쪽). 국가 권력은 상복례를 포섭·규제하고자 하였고, 魏晉대 이후 상복례는 강제규범인 법과 결합하였다(金羨珉, 「貞觀期 服紀改定の 理念的 바탕과 政治的 意義」, 『中國史研究』 18, 2002, 68쪽 ;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東洋史學研究』 98, 2007 ; 洪承賢, 「後漢末 ‘舊君’ 개념의 재등장과 魏晉時期 喪服禮—禮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4, 2006 ;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喪服禮의 확정 과정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2, 2008).

5년 여름 4월, 상복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였다.<sup>13)</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년)

기록상 지증왕이 상복법을 제정·반행하였다고 기록되었을 뿐이며, 상복법의 규정 범주·내용이 어떠하였는지 혹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복법은 다소 느닷없는 조치로 보일 수도 있으며, 잠시 시행되었다가 사라졌을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증왕대 단행된 조치들은 간략하게 서술된 경향이 있으므로 상복법을 제정·반행하였다는 기록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칭에서 상복법은 상례의 복식·절차 규정을 전제하였다는 것에 큰 이견은 없으며, 상장례에서 행해지는 의례 행위·有服者의 참여 수준과 금기하는 행동 등에 관한 예법·규범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대의 기록을 통해 신라 사회에서 행해졌던 상복례의 내용을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염습하여 棺에 넣고, 시체를 묻고 봉분을 세워 장사지낸다. 왕과 부모, 처자의 喪은 1년간 상복을 입는다.<sup>14)</sup> (『주서』 권81, 열전46 동이 신라)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두었다가 3년이 지나면 길일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남편의 喪은 모두 3년간 服[喪]하며, 형제[의 服喪]는 3개월 한다.<sup>15)</sup> (『주서』 권81, 열전46 고려)

부모·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服을 입고, 나머지 친척들은 장례가 끝나면 복을 벗는다.<sup>16)</sup> (『북사』 권94, 열전82 백제)

---

13)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 頒行.”

14) “死有棺斂 葬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북사』 권94, 열전82 신라조도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死有棺斂 葬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居服一年.”).

15)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북사』 권94, 열전82 고려조 기록도 거의 일치한다. 『주서』 권49, 열전41 異域上 고려조에서 고구려의 부모·남편喪의 服制는 중국과 같다고 하였다(“父母及夫喪 其服制同於華夏 兄弟則限以三月.”).

『수서』는 630년대~650년대에 걸쳐 편찬된 정사로, 주로 隨代 혹은 唐 초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수서』 동이전은 중국과의 교섭 혹은 삼국 간의 관계, 출자·제도·풍속 기사가 풍부한 편으로, 신라전은 주로 진평왕~선덕왕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sup>17)</sup>

고구려·백제전과 비교하면, 신라의 상복례에 관한 서술 방식은 그 차이가 도드라진다. 고구려·백제는 부모와 남편, 형제 등의 친족상을 위주로 기록하였으나 신라는 부모상과 함께 처자상·국왕상을 설명하였다. 부모·자손 등과 같은 혈연관계나 혼인으로 형성된 친족 관계와 달리 군주에 대한 복상은 정치적 신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의례상 군신 관계는 부자 관계와 동일시하였으므로 군주에 대한 복상은 부모상에 비견되었는데,<sup>18)</sup> 신라는 특별히 국왕상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복제에서 부모상의 복상이 가장 무거운 등급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구려·백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상에서 3년간 상복을 입었지만, 신라는 부모상에 대한 복상 기간이 1년이었다. 유교에서 부모상은 삼년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라의 1년 복상은 사회·국가 차원의 관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sup>19)</sup>

진평왕은 前王인 진지왕의 폐위로 즉위하였기 때문에<sup>20)</sup> 前王의 상장

16) “父母及夫死者 三年居服 餘親則葬訖除之.”

『수서』에서 백제의 喪制는 고구려와 같다고만 하였다(『수서』 권81, 열전46 四夷上 百濟, “喪制如高麗.”). 『주서』 권49, 열전41 異域上 百濟조는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 則葬訖除之.”라 하여 『복사』의 기록과 거의 같다.

17) 『수서』는 629~636년 편찬되었는데, 641~656년 찬술된 양·진·제·주·수의 5대 志가 『수서』의 志로 편입되면서 정사의 체제를 갖추었다. 『수서』 신라전에 관한 분석은 李康來,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통일기 신라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4, 1998을 주로 참고하였다.

18) 『예기』 「喪服四制」, “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 貴貴·尊尊·義之大者也 故爲君亦斬衰三年 以義制者也.”

19) 일찍이 가장 무거운 복상의 복기가 1년인 점은 신라 예제의 특징으로, 이는 喪制의 사회 기반이 되는 친족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金哲垸,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66쪽). 이를 바탕으로 『수서』·『복사』 신라전, 지증왕대 상복법은 신라 특유의 친족·사회구조를 반영하였다고 이해한다(서영교, 앞의 논문, 2018 ; 박초롱, 앞의 논문, 2019 ;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지시하였을 여지도 있다. 다만 진평왕의 재위 기간이 53년이었다는 점을 참작하면, 즉위할 당시 진평왕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리라 짐작된다. 즉위한 직후 진평왕이 국왕상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할 수 있었을 만큼 정치적 역량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前王을 예우하며 전통을 지켰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라에서 왕과 부모, 처자상에 대한 1년 복상은 언제부터 규정되었을까. 520년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sup>21)</sup> 喪葬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이전인 504년 상복법이 제정되었다. 법흥왕이 특별한 사유없이 父王인 지증왕이 제정한 상복법의 내용 대부분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법흥왕 이후 즉위한 진흥왕·진지왕은 지증왕계 인물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진평왕은 진흥왕의 태자인 동륜의 아들이었으므로 지증왕의 직계 후손이었다.

정황상 지증왕의 직계 후손들은 상복법의 내용을 따랐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국왕상에 관한 의례 내용은 큰 변함없이 대부분 준수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22)</sup> 그러므로 『수서』 신라전의 내용은 지증왕대 제정된 상복법의 일부 내용으로 이해해도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sup>23)</sup> 지증왕대 상복법은 7세기 초 혹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그 사이 법흥왕대 율령의 일부로 정리되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서』 신라전에서 상장례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풍습에 관한 설명일까. 이때 8세기(757년) 일본의 「養老令」의 사

20) 『삼국사기』는 진지왕이 죽었다고 하였으나, 『삼국유사』 권1, 기이2 도화녀비형량조에서 진지왕은 荒政으로 폐위되었다고 전한다.

2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7년,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22) 중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복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으며, 唐代에도 국가 의례는 여러 차례 정비되었다. 신라의 경우, 당으로부터 吉凶要禮를 받았던 신무왕 6년(686) 이전까지 예제상 큰 변화를 일으킬만한 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박초롱, 앞의 논문, 2019, 9쪽).

23) 특히 국왕상에 대한 1년 복상 규정은 자연발생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복법에서 정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서영교, 앞의 논문, 2018, 95~96쪽). 『수서』·『북사』 신라전의 서술은 지증왕대 정비된 상장례 전반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였다(채미하, 앞의 논문, 2012a, 50~51쪽).

레이지만, 지배층의 상장례를 규정한 喪葬令의 조문 가운데 복기 규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참고할 수 있다.

무릇 상복을 입는 기간[服紀]에서 君·부모와 남편, 本主는 1년이다. 조부모·양부모는 5월이고 증조부모·외조부모·伯叔·고모·처·형제자매, 남편의 부모, 적자는 3월이다. 고조부모·외삼촌과 이모, 嫡母·계모, 함께 사는 계부,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衆子, 적손은 1월이다. 衆孫·사촌[從夫의 형제자매], 형제의 아들은 7일이다.<sup>24)</sup> (『養老令』 권9, 「喪葬令」 第26, 17조)

상장령의 17조는 君·本主, 근친을 위한 복상 기간을 규정한 조문으로, 친속 관계 및 신분에 따라 상복을 입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조문 첫머리의 ‘君’은 천자(천황)를 가리키는 것으로,<sup>25)</sup> 군신 관계에 의한 복상도 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면, 이전 大喪의 복상 기간은 상황에 따라 고정적이지 않았으나 점차 1년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sup>26)</sup> 그리고 조문에서 규정된 服紀는 상장례 외에도 요역의 면제·관인의 고과와 같은 令의 조문에도 보장되었던 만큼<sup>27)</sup> 실제 운용되던 법 조항이었다. 그러므

24) “凡服紀者 爲君·父母及夫·本主一年 祖父母·養父母五月 曾祖父母·外祖父母·伯叔姑·妻·兄弟父母·夫之父母·嫡子三月 高祖父母·舅姨·嫡母·繼母·繼父同居·異父兄弟姊妹·衆子·嫡孫一月 衆孫·從夫兄弟姊妹·兄弟子七日.”

25) 『令義解』 권9, 「喪葬令」 第26, 17조, “凡服紀者 爲君<謂天子也>·父母及夫·本主<謂其文學家令壽>一年…”

『영의해』는 833년 찬집한 『양로령』의 관찬 주석서로, 이전부터 존재했던 율령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였다. 『영의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井上光貞, 「日本律令の成立とその注釈書」, 『日本思想大系 3 : 律令』, 岩波書店, 1977을 참고.

26) 稲田奈津子, 『日本古代の喪葬儀禮と律令制』, 吉川弘文館, 2015, 71~72쪽. 물론 복기조가 정해진 이후에도 1년 복상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군신들의 건의에 따라 前王의 복상을 6개월로 정하기도 하였다(『속일본기』 권36, 天應 元年[780] 12월 丁未). 그러나 新王인 환무천황은 다시 복상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속일본기』 권36, 天應 元年 12월 辛亥, “辛亥 勅曰 昨緣群卿來奏 天下着服 以六月爲限…宜改前服期 以一年爲限 自餘行事 一依前勅.”).

27) 『養老令』 권4, 「賦役令」 第10, 21조, “凡遭父母喪 並暮年徭役.”; 『養老令』 권4, 「選叙令」 第12, 17조, “凡帳內資人等 本主亡者 暮年之後 皆送式部省…” 暮年は 1년 복

로 상복법의 상복을 입는 기간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규정된 제도적 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28)</sup>

한편, 고구려는 형제상에서 3개월간 복상하였으며 백제는 부모·남편 이외의 친족상에서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는다고 하였다. 신라는 국왕상, 부모·처자장에 대한 복상이 유일한 복상이었을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로령」의 수준만큼 친족 관계가 엄밀하게 구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라의 상례에서 상복의 경중이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조에 말하기를, “...종묘의 주인은 잠시라도 비워서 안 되니 태자는 곧 棺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죽고 나서 10일 뒤에 바로 庫門 바깥 뜰에서 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통상적 규범으로 하되, 喪을 치르는 제도는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도록 힘쓰라...”<sup>29)</sup>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7월 1일)

670년 문무왕은 사망하면서 태자(후의 신문왕)의 즉위 방식과 자신의 사후 喪制度 절차, 국가 운영에 대한 지시 사항을 유조로 남겼다. 특히 문무왕은 상복의 경중은 정해진 규정[常科]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는데, 복상 수준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친족 구조 혹은 예법이 바뀌면서 有服者·복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전부터 상복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복상 수준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상복법은 부모·처자 등의 혈연·친족 관계에 의한 복상뿐만 아니라 국왕상까지 포함하여 복상 기간을 규정하였다. 사료상 喪裝의 종류·수준까지 논하기 어렵지만, 최고 복상 기간은 1년이었으며 복상 수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지증왕대 제정

상으로, 군·부모와 남편·본주의 복기 1년과 일치한다. 假寧令을 비롯한 儀制令·選叙令 등에도 근친에 대한 복기가 지켜졌다(稻田奈津子, 앞의 책, 2015, 70~71쪽).

28) 홍승우, 앞의 논문, 2020, 369쪽.

29) “遺詔曰...宗廟之主 不可暫空 太子即於柩前 嗣立王位...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服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務從儉約...”

된 상복법은 신라 사회에서 상장례와 관련된 제도적 규범의 하나로 준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상복법 제정의 배경

상장례는 망자를 떠나보내는 의례로, 의례의 주관자는 망자의 가계·권위 계승자였다. 이처럼 상장례는 망자의 생전 정치·사회적 위상과 후계자의 위상을 함께 드러내는 의례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왕과 그 아래 여러 귀족 관료들은 차등이 있어야 하고, 귀족 상호 간도 위계에 따른 구분이 있었다. 공개적 의례에서 상호간 차등을 보여줌으로써 상호간 사회 전체의 신분 위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형벌·행정, 국정 운영에 관한 포괄적 법제인 율령이 반포되기 전인 504년(지증왕 5) 상복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증왕은 상복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502년 국왕상에서 순장을 금지하는 습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상장례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관념·전통을 전제하여 매우 보수적 관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증왕의 조치는 그의 즉위 과정·전후 사정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증마립간이 즉위하였다.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智大路<혹은 智度路라 하고, 또는 智哲老로 전한다.> 내물왕의 증손으로 습보갈문왕의 아들이며, 소지왕의 再從弟이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다.…전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위를 이으니 이때 나이가 64세였다.<sup>31)</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즉위년)

제22대 지증마립간. <智哲老 또는 智度路王이라 하고 김씨이다. 아버지는 눌지

30) 홍승우, 앞의 논문, 2020, 362쪽. 중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무거운 복상 등급임에도 비교적 짧은 1년 복상이었던 점이 주목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31) “智證麻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 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照知王之再從弟也 母金氏鳥生夫人 訥祗王之女…前王薨 無子 故繼位 時年六十四歲.”

왕의 동생 기보갈문왕이며, 어머니는 김씨 오생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다.···><sup>32)</sup>  
(『삼국유사』 권1, 왕력 지정마립간)

500년 11월 소지마립간이 죽자 소지마립간의 再從弟(『삼국사기』) 혹은 再從叔(『삼국유사』)인 지증왕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503년 9월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sup>33)</sup> <포항 냉수리 신라비>(이하 냉수리비)에서 지증마립간은 ‘至都盧葛文王’으로 나온다. 내물왕대 이래로 아들(또는 사위)이 왕위를 계승해왔던 것과 달리 고령의 방계 인물이 즉위한 상황은 다소 이례적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즉위한 이후에도 지증왕이 마립간을 칭하지 않고 갈문왕을 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증왕의 즉위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한 듯하다.<sup>34)</sup>

소지마립간이 재위하는 동안 정치적 분란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sup>35)</sup> 말년에 폐위되었다거나 정변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소지마립간이 사망할 때의 나이<sup>36)</sup>나 직전의 행적을 고려하면<sup>37)</sup> 그의 죽음이 다소 급작스러운 감이 있다. 즉 소

32) “第二十二智訂麻立干 <一作智哲老又智度路王 金氏 父訥祗王弟期宝葛文王 母烏生夫人訥祗王之女···>”

33) <포항 냉수리 신라비>,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至都盧葛文王.” 냉수리비의 건립 시기는 내물 28년(383), 눌지 27년(443), 지증 4년(503)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주로 503년설에 동의한다(鄭求福,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34) 소지마립간은 500년 11월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유폐되었다가 502년 3월 사망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鄭求福, 앞의 논문, 1990, 42~43쪽). 지증마립간이 정치적 변란을 통해 즉위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으며(朱甫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 6, 1989, 27쪽) 정변을 주도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李喜寬, 「新羅上代 智證王系の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 『東亞研究』 20, 1990, 73~78쪽).

35) 『삼국유사』 권1, 기이1 사금갑조의 내용이나 날이군의 행차·納女문제(『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9월)가 대표적이다. 박성천, 「新羅 智證王의 卽位過程에 대한 研究」, 『慶州文化研究』 6, 2003, 7~11쪽을 참고.

36) 소지마립간의 출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父인 자비왕과 母인 미사흔의 딸은 461년에 혼인하였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4년). 소지마립간이 죽을 때 40세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한 셈이다.

지마립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사망할 당시 소지마립간에게 정통한 후계자가 없었으며,<sup>38)</sup> 눌지-자비-소지로 이어지는 눌지왕의 직계 자손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상 소지마립간의 형제나 조카,<sup>39)</sup> 혹은 자비마립간의 형제나 그 후손의 행적<sup>40)</sup>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왕에 의해 결정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왕위계승 문제는 지배층 내부의 논의나 유력자의 적극적 의지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당시 내물왕계 인물 가운데 지증왕을 비롯하여 소지마립간의 外祖父인 미사흔계 인물<sup>41)</sup>이나 장인인 내숙,<sup>42)</sup> 이사부의 가계 인물<sup>43)</sup> 등이 활동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증왕의 祖父 혹은 父가 갈문왕이었으며,<sup>44)</sup> 지증마립간도 갈문왕이었다. 즉위 당시 지증왕의 나이를 고려하면 지증왕은 상당히 오

37) 소지마립간은 사망하기 2달 전까지 경북 영주지역인 날이군에 여러 차례 행차하기도 했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9월).

38) 李鍾旭, 『新羅 上代 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88~89쪽. ‘無子’는 정확하게는 ‘無嗣子’를 의미한다(서영교, 앞의 논문, 2018, 99쪽).

39) 소지마립간은 『삼국사기』에서 자비왕의 ‘長子’로, 『삼국유사』 권1, 왕력조에서 자비왕의 ‘三子’로 기록되어 형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손위 형제가 살아 있었다면 소지마립간의 형이 왕위를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0) 자비왕은 눌지왕의 長子라고 하여(『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원년) 자비왕의 동생, 즉 소지왕의 숙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눌지·자비·소지마립간의 재위 기간이 각각 41년·20년·21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숙부들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사촌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4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즉위년, “炤知<一云毗處>麻立干立 慈悲王長子 母金氏 舒弗邯末斯欣之女.”

42) 내숙은 486년 2월 이별찬이 되기도 하였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8년 2월). 다만 『삼국사기』는 妃父가 내숙이라고 하였으나(『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즉위년) 『삼국유사』 권1, 왕력은 왕비가 기보갈문왕의 딸이라 하였다(“第二十一毗處麻立干…妃期寶葛文王之女.”).

43) 『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 “異斯夫<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이사부는 지증왕계와 다른 계보로 보기도 한다(李基東, 앞의 책, 1982, 77~79쪽).

44) 그리고 지증왕의 어머니는 눌지왕의 딸이었다. 눌지왕의 직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물왕계 인물 가운데 지증왕의 가계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랫동안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sup>45)</sup> 당시 내물왕계 인물 중에서 가계나 정치적 경륜을 고려하면, 지증왕의 집권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46)</sup>

즉위한 이후에도 지증왕은 여전히 갈문왕을 칭하였는데, 그 시기는 前王의 상장례 기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의례상 喪主가 지켜야 할 의무와 더불어 금기하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었고, 新王는 선왕의 상장례를 끝마친 후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증왕의 사례는 다소 예외 사례에 가깝지만, 백제 위덕왕의 즉위 과정을 참고해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자<sup>47)</sup> 위덕왕이 곧바로 즉위하였다.<sup>48)</sup> 이와 달리 『일본서기』에서 위덕왕은 557년 3월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49)</sup> 두 사서의 기록 차이는 위덕왕이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sup>50)</sup> 위덕왕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 위덕왕은 557년 이전부터 국정을 운영하였고<sup>51)</sup> ‘君王’으로 칭해지고 있었다.<sup>52)</sup> 이러한 이유로 약 3년간의 공백은

45) 지증왕은 즉위 초창기부터 정치·사회경제적 조치를 단행하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갈문왕이 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지증왕의 정치적 영향력이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46) 내물왕계 인물들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지증왕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박성천, 앞의 논문, 2003, 24~27쪽; 윤진석, 「신라 智度路葛文王의 ‘攝政」,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91쪽).

4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7월; 권26, 백제본기4 성왕 30년 7월.

48)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즉위년.

49) 『일본서기』 권19, 흙명 18년 3월, “十八年 春三月庚子朔 百濟王子餘昌嗣立 是爲威德王.”

50) 『일본서기』 권19, 흙명 15년 12월조에 따르면 태자였던 위덕왕은 신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왕은 태자(후의 위덕왕)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신라군의 기습으로 전사하였다고 전한다.

51) 일본에 성왕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일본서기』 권19, 흙명 16년 2월).

52) 『일본서기』 권19, 흙명 16년 8월. 신하·백성들이 위덕왕을 ‘君王’으로 칭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위덕왕은 이미 즉위해 있었다고 보았다(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

통치자의 부제가 아닌 정식으로 권위를 승계받는 의례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미 백제 왕실에서 성왕이 삼년상을 치렀던 만큼<sup>53)</sup> 先例에 따라 위덕왕도 삼년상을 치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54)</sup> 보통 新王의 정식 즉위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이루어졌지만, 위덕왕은 성왕의 상장례를 온전히 끝마치고 왕으로서 정식 즉위한 셈이다.<sup>55)</sup> 지증왕은 선왕의 유조에 의해 즉위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후계자임을 확인하는 의례 절차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지증왕의 순장금지령은 시기상 소지마립간의 장례 의식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년 봄 2월 습을 내려 순장을 금하게 하였다. 이전 국왕이 죽으면 남녀 다섯 명씩을 순장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금지하였다.<sup>56)</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 2월)

기록상 국왕의 장례에서 행해지는 순장을 금지하였지만, 순장 관행은 4~5세기 중앙과 지방 지배층에서 유행하던 葬制의 하나였다.<sup>57)</sup> 신라

와 외교」, 『韓國人物史研究』 2, 2004, 164쪽).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명문(「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丁亥 妹兄公主供養舍利」)을 통해서도 위덕왕의 즉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정해년은 567년으로, 즉위년은 555년이 된다. 『삼국사기』는 즉위창원법을, <능산리지 석조사리감>은 유년창원법을 따른 것으로(김수태, 앞의 논문, 2004, 162쪽) 위덕왕의 즉위 시기를 554년경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 <무령왕지석>의 내용에서 성왕이 父王 무령왕을 위해 삼년상을 행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權五榮,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2000, 14~16쪽).

54) 김수태, 앞의 논문, 2004, 167쪽 ; 조경철, 「백제 왕실의 3년상-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5, 2009, 123~128쪽.

55) 성왕은 『삼국사기』에서 523년 5월에 즉위한 것으로, 『일본서기』 권17, 계체 18년 1월조에서 524년 1월에 즉위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사실이 늦게 알려졌을 수도 있지만, 현실 문제·정치적 상황으로 후계자의 즉위(식) 시기는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6) “三年 春三月 下令 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57) 왕(죽)급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에 9명, 북분에 10명, 천마총에 5명 정도의 순장인을 추정하였으며(李恩碩, 「慶州 皇南大塚 構造에 대한 一考察」, 『考古歷史學志』 15, 1999) 금관총에서 순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崔鍾圭, 「積石塚의 封, 槨, 殉」,

권역에서 순장은 무덤의 규모·부장품의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해지다가<sup>58)</sup> 6세기 전반이 되면 순장은 점차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증왕의 금지령으로 인해 순장 관행이 단절된 것인지, 이미 의례 절차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폐지하였던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순장하는 관행이 여전히 고수해야 하는 전통으로 유지되었다면, 지배층의 반발로 순장 관행을 없애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sup>59)</sup> 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sup>60)</sup> 순장의 규모는 축소되거나 의식 자체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순장 풍습은 마립간의 장례에서 행해지는 遺習의 하나였다가 지증왕의 습으로 금지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61)</sup>

이처럼 지증왕은 이전과 달라진 상장 관행을 정리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상장례를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전반 지배층의 전통 묘제였던 적석목곽분을 대신하여 횡혈식석실분이 채용되고, 평지에서 산기슭으로 묘역이 옮겨지는 등 묘제·장례의 변화가 있었다.<sup>62)</sup> 왕

『考古學探求』 9, 2011). 주변 지역의 수장층 무덤에서 2~3인 정도의 순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권역의 순장 양상의 종합은 金龍星, 「新羅 高塚의 殉葬」, 『古文化』 51, 2002; 이성준·김수환, 「韓半島 古代社會의 殉葬文化」, 『韓國考古學報』 81, 2011 등을 참고.

58) 金龍星, 앞의 논문, 2002, 80~82쪽;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殉葬」, 『고고광장』 26, 2020, 27~30쪽.

59) 일본 왕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646년(大化 2) 自殉 등을 금지하는 조칙을 내렸으나 649년 大臣 蘇我倉山田石川麻呂가 자결하자 처자 8인이 殉死하기도 하였다(『일본서기』 권25, 효덕 5년 3월 25일). 풍습에 관한 금지령이 획일적으로 관철되거나 일시에 풍습이 단절되기는 어려웠다.

60) 노동력을 보존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인적 자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權五榮, 「고대 영남지방의 殉葬」, 『韓國古代史論叢』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7~58쪽) 유교적 덕치 이념의 유입으로 인간관이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김기흥, 「한국 殉葬制의 역사적 성격」, 『建大史學』 8, 1998, 9~18쪽).

61) 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은 고분의 박장화वाद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황남대총 남분 이후에 축조되는 대형 고분은 부곽이 사라지고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박장이 행해졌다. 상복법의 제정·순장의 금지는 상장 관행의 변화를 규정화한 조치로 이해하였다(김용성,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340~341쪽).

62) 횡혈식석실분의 규모는 적석목곽분에 비해 고분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부장품은

등급 무덤의 변화는 순장의 금지 이외도 상장례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3)</sup> 특히 葬制, 즉 매장 방식의 변화는 장송 의례뿐만 아니라 殯, 매장 이후의 의례 등 상장례 절차의 변화를 동반하였다.<sup>64)</sup> 새로운 葬制의 도입과 상복법의 제정, 두 요소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상장례를 격식화하면서<sup>65)</sup> 상복을 입는 방식·기간도 고정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 지증왕의 입장에서 상장례의 정비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자신의 喪葬을 위한 조치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증왕은 즉위 당시 고령으로, 현실적으로 곧 있을 본인의 상장례를 염두에 둘 나이가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지증왕은 前王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집권을 시작으로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승계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先王의 후계자임을 강조해야 하는 젊은 新王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증왕은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웠을 수 있겠다.

특히 상복법은 지증왕이 ‘신라국왕’을 칭한 이후 처음으로 제정·반행한 법이었다. 지증왕은 오랫동안 정계에서 활동했던 만큼 정치적 연륜이 쌓였을 것이며, 오랜 경험을 통해 국정 운영과 체제 정비에 대한 지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권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증왕이 상복법을 제정한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후장보다 박장이 이루어졌다. 추가장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횡혈식석실본은 1인장을 탈피한 형태로 주목되었다.

63)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505~507쪽; 金大煥, 「新羅 王京 古墳의 분포와 체계 변화 -石室墓 출현기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新羅王京의 構造와 體系)』 27, 2017, 222~227쪽. 범흥왕대 율령 반포와 연관을 짓기도 하지만, 그 이전 지증왕대 상복법의 규제를 주목하기도 한다(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81쪽; 황중현,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수용과 전개』, 계명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10~113쪽).

64) 홍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3, 197쪽. 수혈식 고분은 매장 시설을 설치하고 시신을 매장한 다음 봉토의 축조가 완료되어야 매장행위가 완전히 완결된다. 반면 횡혈식과 유사한 매장 방식인 횡구식은 매장 시설·봉토 축조가 완료되고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여 주목할만하다.

65) 김용성, 앞의 책, 2015, 340쪽.

### Ⅲ. 집권체제의 정비와 상장례

#### 1. 귀족 관료의 서열화

지증왕은 즉위 초창기부터 순장 관행을 금지하였으며, 신궁을 親祀하는 등 국가 의례를 정비하였다.<sup>66)</sup> 이와 더불어 503년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으며, 504년 여러 지역에 대규모 축성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67)</sup> 곧이어 505년 지증왕은 주변 지역을 州·郡·縣(城·村)으로 구획하고 군주를 파견하는 등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지증왕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변의 복속지역을 포괄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복법이 제정되었다.

신라 권역에 국가의 일원적 지배력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집권체제의 전제는 마립간(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 질서를 갖추는 것이었다.<sup>68)</sup> 잘 알려진 것처럼 사로국은 경주 일원에 존재했던 정치 세력들이 결집하여 성립했다. 세력 집단은 초보적 수준이나마 지배조직을 갖추어 만큼<sup>69)</sup> 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하였으며, 이사금·마립간은 정치 세력들 간의 역학 관계를 조율하면서 지배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법제상 경위제가 완비된 것은 520년(법흥왕 7) 전후한 시기였지만,<sup>70)</sup>

6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 2월. 지증왕대 신궁 제사는 국가 의례로 정례화되었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지증왕대 1차적으로 祀典이 정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94~95쪽).

67) 신라가 분립적으로 존재했던 주변 정치체의 기반을 해체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역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적 영역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한다(全德在, 『新羅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서울대 국사학과), 1990, 45~50쪽).

68)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45~46쪽.

69) 이른 시기의 기록이지만 파사이사금대 6부에 이찬 외에 位卑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8월). 고구려의 사례를 참고하면, 왕과 마찬가지로 大加는 관료군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삼국지』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고구려, “諸大加亦自置使者·皐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皐衣先人同列.”).

이전부터 일원적 관등(경위) 체계의 기본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냉수리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냉수리비에서 지도로갈 문왕과 사훼·훼부의 干群 소지자 4인과 본피·사피부의 간지 2인은 사안을 논의하여 교를 내리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此)七王等’이라고 표현하였다. 비문에서 7왕이 함께 교를 내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마립간의 정치권력이 여타 지배층을 압도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냉수리비는 여전히 ‘간지’를 칭하는 인물이 있고, 인명을 나열할 때 소속부가 우선시되는 등의 관행이 유지되었다.<sup>71)</sup>

한편, 비문에서 왕경인이 소지한 位號는 간지 외에도 일간지(2)부터 나마(11)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적 실무를 처리하는 관료 조직도 확대·체계화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국가 직무를 담당하는 인물에게 位號를 준 주체는 마립간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위호 체계를 따라 직책·지위에 적합한 位號를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때 김씨 집단이 마립간위를 독점하면서 특정한 위호 체계가 국가 차원의 관등 체계로 자리를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sup>72)</sup>

70) 盧泰敦,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1989, 183~186쪽; 朱甫墩, 「6세기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255~261쪽.

71) 개인이 속한 部가 중요한 나열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전사인 중에서 사훼부의 蘇那支가 가장 끝에 열거된 것을 보면 소속부가 유일한 나열 기준은 아니었던 것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72) 마립간기 사로국 내부의 다원적 위호 체계가 일원화되는 과정에 관한 이해는 하일식, 앞의 책, 2006, 101~106쪽을 참고하였다.

<표 1> 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왕경인

	출신(部)	인명	지위 (관등)	비고
此二王 · 前世二王	喙	斯夫智	王	
		乃智	王	
此七王等	沙喙	至都盧	葛文王	共論 · 敎
		斯德智	阿干支 (아찬, 6)	
		子宿智	居伐干支 (급찬, 9)	
	喙	尔夫智	壹干支 (이찬, 2)	
		只心智	居伐干支 (급찬, 9)	
	本彼	頭腹智	干支	
	斯彼	暮斯智	干支	
此七人	沙喙	壹夫智	奈麻 (11)	典事人
		到盧弗		
		須仇休		
	喙	心訾公	[耽須道使]	
	喙	沙夫		
		那斯利		
	沙喙	蘇那支		

특히 공론 집단들의 위호가 일간지(2)부터 거별간지(9)까지 걸쳐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문왕과 함께 교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은 그들의 기득권 · 세력 기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론 주체들의 전통적 지위는 어느 정도 비슷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공론 주체들이 소지한 위호의 격차는 큰 편이다. 공론 집단의 인물들이 소지한 위호는 각 세력 집단의 전통적 위호라기보다 마립간으로부터 받은 관등으로 이해된다.<sup>73)</sup> 상위 지배층의 일부도 마립간으로부터 관등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는 마립간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관등 체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3) 하일식, 앞의 책, 2006, 110쪽. 냉수리비에서 왕경인들이 관등을 소지한 양상은 관등 체계가 정비된 초창기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503년 10월, 지증마립간은 군신들의 뜻에 따라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신라국왕’이라는 존호를 칭하였다.

4년 겨울 10월 여러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길,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이래 나라의 이름이 정하지 않아 斯羅로 부르거나 혹은 斯盧라 칭하거나 혹은 新羅라고 말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 ‘新’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고 ‘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니, 이를 나라의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보건대, 예로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모두 ‘帝’ 또는 ‘王’을 칭했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 22세에 이르기까지 단지 방언으로 칭하고 존귀한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뜻으로 삼가 ‘신라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립니다.”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sup>74)</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

이후 신라왕은 ‘麻錦王’<sup>75)</sup>을 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왕’호를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식 표현을 수용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위의 기사에서 왕호의 확정 이전까지 일부 유력자까지 ‘왕’으로 칭했던 관행을 금지하고, 국왕만이 ‘왕’의 칭호를 쓰도록 한 조치로 이해된다.<sup>76)</sup> 무엇보다 群臣의 요청으로 ‘국왕’의 칭호가 정해졌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여러 지배 세력 가운데 마립간이 우위에 서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77)</sup>

그리고 왕의 존호와 함께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하였다. 마립간기 신라 중앙은 왕도를 정비하였으며<sup>78)</sup> 우역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sup>79)</sup>

74) “四年 冬十月 羣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75) <울진 봉평리 신라비>, “喙部牟卽智麻錦王.”

76) 鄭求福, 앞의 논문, 1990, 43쪽.

77) 朱甫墩, 앞의 논문, 1990, 248~249쪽.

7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2년, “十二年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7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관도를 정비하면서 중요한 거점에 도사를 파견했을 것으로 파악한다(주보돈, 앞의 책, 1998, 63~64쪽).

중앙 정부가 직접 주변 지역을 지배·관리하면서 복속지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을 것이다. 국호의 확정은 왕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속지역도 ‘신라’로 포괄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sup>80)</sup> 직후 505년 지방제도를 시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일원적 기준으로 왕경 지배층을 위계화하고 있었던 만큼 지방민도 신라 전체의 위계 서열로 포섭하고자 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지방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등(외위)은 524년(법흥왕 11)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서 확인되지만, 지방민을 포섭하고 주군제를 정비할 무렵부터 일원적 기준에 따라 지방민에게 관등을 수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81)</sup>

국호·왕호의 확정에 뒤이어 제정·시행한 상복법은 마립간의 정치권력이 격상되었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화된 관등 체계를 갖추고, 이후 지방세력까지 별도의 서열 체계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상복법이 제정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복법에서 국왕상에 관한 규정을 주목해보면, 국왕상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군신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복을 전제한 규정이었다. 국왕상에 대한服制는 왕과 有服者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sup>82)</sup> 복상자 모두가 같은 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상복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 왕조의 경우, 先帝의 상장례 절차·상복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참고할만하다. 일찍이 중국 왕조의 大喪은 短喪으로 행해져<sup>83)</sup> 喪期가 짧았지만, 舉哀·복상 의무는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었

80) 주보돈, 앞의 책, 1998, 315~324쪽; 하일식, 앞의 책, 2006, 203쪽. 특히 469년(자비마립간 12) 왕도의 정비는 왕도와 대비되는 지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주보돈, 앞의 책, 1998, 65~66쪽).

81)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974, 58~59쪽;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7(서울대 국사학과), 1981, 116~117쪽; 權惠永, 「新羅 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 『韓國史研究』 50·51, 1985, 91~93쪽; 하일식, 앞의 책, 2006, 219~220쪽.

82) 山下洋平, 「律令国家における臣下服喪儀礼の特質-唐制との比較を通して-」, 『史学雑誌』 121-4, 2012, 46쪽.

83) 前漢 文帝는 복상 기간을 ‘以日爲月’로 하여 장례 후 36일만 복상을 치르라고 유조를

다.<sup>84)</sup> 그래서 군주의 상복 기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지배층 구성원의 從服<sup>85)</sup>도 함께 논의되었다. 본래 북위 왕조도 短喪이 원칙이었으나, 490년 효문제는 할머니인 풍태후의 상을 일년상으로 결정하였다.<sup>86)</sup> 그리고 효문제는 일년상을 기준으로, 근친과 관인, 吏民의 복상을 지시하였다. 다소 장황한 감이 있지만, 효문제의 복상 지시를 통해 종복을 정하는 기준을 엿볼 수 있다.

禮를 생각하여 卒哭한 후에 장차 變服을 한다. 짐이 受服하는 날에 庶民과 小官은 모두 吉服으로 갈아입어라. 內職 중에서 羽林中郎[종4품上] 이하와 虎賁郎[종6품上] 이상 그리고 外職[지방관] 중에서 5품 이상으로 상복을 입지 않은 자는 素服으로 3개월로 끝내라. 內職과 外臣 가운데 衰服하는 자는 練禮에 따라 바꾸고, 外臣은 3개월이 되면 벗어라. 諸王·三都[內·中·外都大官]·부마, 內職은 내년 3월 그믐 짐의 練[祭]에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어라. 侍臣은 君[군주-효문제]服과 같이 입고, 짐이 내리는 바에 따르라. 이는 비록 옛 법식이 아니지만, 인정을 따르고 도리에 입각하여 귀천의 차이와 원근의 구별을 지닌다.<sup>87)</sup> (『위서』 권108-3, 禮志4-3 第12)

남겼으며(『사기』 권10, 孝文本紀10; 『한서』 권4, 文帝紀4) 魏武帝는 ‘既葬除服’라 하여 장례를 마치고 바로 상복을 벗으라고 하였다(『삼국지』 권1, 魏書1 武帝紀1). 漢魏權制에 의해 大喪은 短喪으로 행해졌고, 남조시기에 상복을 입지 않으나 일정 기간 마음으로 상증과 같이 망자를 애도하는 心喪과 결합하여 國制로 정착하였다.

84) 前漢 文帝의 유조에서 복상 대상은 近親부터 吏民까지 포괄하는데, 喪事를 주재할 후계자·근친과 群臣만 葬後 36일간 복상하고 백성은 3일간 곡을 하고 상복을 벗으라고 지시하였다(『사기』 권10, 孝文本紀10). 나머지 族親은 36일 내에서 복상했을 것으로 파악한다(陳戌國, 『中國禮制史:秦漢卷』, 湖南教育出版社, 2002, 159쪽).

85) 『의례』 喪期齊衰不杖期·『예기』 大傳 鄭玄注에서 군주 혹은 군주의 친족을 위해 복을 하는 행위를 從服이라고 한다. 종복은 죽은 군주뿐만 아니라 군주를 따라 군주의 父·前王, 친족을 위해 상복을 입는 행위까지 포함하였다.

86) 논의 과정은 金容天,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中國史研究』 86, 2013, 131~140쪽을 참고.

87) “案禮 卒哭之後 將受變服 於朕受日 庶民及小官皆命卽吉 內職羽林中郎已下 虎賁郎已上 及外職五品已上無衰服者 素服以終三月 內職及外臣衰服者 變從練禮 外臣三月而除 諸王·三都·駙馬及內職 至來年三月晦朕之練也 除凶卽吉 侍臣君服斯服 隨朕所降 此雖非舊式 推情卽理 有貴賤之差 遠近之別.” ([ ]는 필자의 설명)

본래 상복은 喪期를 마칠 때까지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점차 무거운 복에서 가벼운 복으로 바꾸면서 除服하는 절차를 거쳤다.<sup>88)</sup> 효문제는 자신이 變服하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벗는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서인이나 하위 관인의 종복 기간은 짧았으며 고위 관인과 종실·諸王은 상복을 입는 기간이 길었다.<sup>89)</sup>

효문제는 자신의 결정이 특별한 것이지만 신분의 귀천·친속의 원근을 구별하는 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망자와의 친연 관계·신분의 고하를 따라 喪束·喪期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관인의 종복 규정은 官制를 바탕으로, 內職과 外職을 나누어 관품의 고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졌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당시 신라에도 지배조직이 체계화되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일원화된 서열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즉 국왕상에서 망자와의 혈연적 친소 이외에도 상복의 등차를 정할 수 있는 일원적 기준이 갖추어지고 있었다. 국왕상에 대한 服制는 복기 1년을 기준으로, 군주와의 관계에 따라 복장·참여 수준이 달리 정해졌을 것이다.<sup>90)</sup> 상복법이 제정된 이후, 국왕상에서 복상 수준의 차이는 有服者들간 신분의 상하·관등의 위계 서열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복법은 국왕상에만 한정된 조치가 아니었다. 상복법은 반포된 이후에 치러지는 지배층의 상장례에 적용되었을 것이다.<sup>91)</sup> 상장례는

88)卒哭은 슬픔이 느낄 때마다 곡을 하는 無時哭을 그치고 아침과 저녁만 정기적으로 곡을 하는 것이다. 小祥(練祭)은 부모가 죽은 지 1주년(13개월)이 되는 날 제사를 지낸 후 상복을 벗고 練服으로 갈아입는다. 大祥은 2주년(25개월)되는 날의 제례이며, 1달 후 禫祭를 지내고 상복을 완전히 벗는다.

89) 효문제의 종복 지시와 복상 대상에 대한 분석은 山下洋平, 『北魏文明太后崩御時における孝文帝の服喪儀禮』, 『東方學』 135, 2018을 참고하였다.

90) 중국 西晉代의 사례를 참고하면, 西晉정부는 태시율령을 제정하였으며 官制와 새로운 爵制인 五等爵制를 정비하여 지배층 구성원의 등급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행위 규범, 즉 예제를 제정하고 이를 법령으로 고정화하였다(洪承賢, 앞의 논문, 2008, 10~11쪽). 지증왕이 상복법을 제정했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91) 관념적으로 상복법은 民 전체를 포괄하였겠지만, 사실상 규제 대상은 주로 귀족 관인

망자의 죽음부터 매장, 복상을 마칠 때까지 의례 절차가 이어졌고, 有服者의 복상 수준은 의례의 참여 방식·정도, 금기 수준과 맞닿아 있었다. 이처럼 상복법은 지배층의 신분 등급에 따른 규제·허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장례에서 먼저 골품제의 원초적 형태가 국가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92)</sup>

## 2. 위계에 따른 상장례 규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증왕은 국왕의 葬制에서 순장을 금지하였으나, 이는 지배층 전체의 상장례 규모를 제약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葬制는 묘주의 신분·계급을 표상하였으므로 여타 지배층의 상장례 수준은 왕의 수준보다 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장례의 수준은 망자의 정치적 위계·신분 등급, 현실적 영향력이 전제되어 있었다.

신라에서 망자의 신분·계급에 따라 상장례 수준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음을 망자에게 부의품을 하사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무]대왕이 부음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며 부의로 고운 빛깔의 비단 1천 필·租 2천 섬을 내려 喪禮에 쓰도록 하였고, 군악대에서 북 치고 피리 부는 사람 1백 명을 보내주었다.…<sup>93)</sup>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下)

신문대왕 때에 이르러 죽었다. 葬禮를 지낼 때 관[청]에서 그 賻[物]을 주었다. 옷가지와 물품을 준 것이 매우 많았는데, 집안의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지 않고 모두 佛事に 맡겼다.<sup>94)</sup> (『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충일 것이다(홍승우, 앞의 논문, 2020, 370~371쪽).

92) 일찍이 상복법은 왕실 제사에서 왕을 중심으로 친족 관계·지배층 구성원의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6세기 중반 신분 등급의 제도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설명되었다(李基東, 앞의 책, 1984, 79~81쪽).

93)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94) “至神文大王時卒 葬事官供其賻 贈衣物匹段尤多 家人無所私 皆歸之佛事.”

문무왕은 태대각간(태대서발한)이었던 김유신의 죽음을 전해 듣고, 喪禮에 쓸 비단 1,000필 · 租 2,000섬을 하사하였으며 고취군악대를 보냈다. 김유신의 喪家에 제공된 賻儀의 내용은 중국 왕조의 喪葬令 규정에서 유사한 내용<sup>95)</sup>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사찬인 강수가 죽자 관청에서 장례에 쓸 옷가지 · 물품을 주기도 하였다. 최고위층이 아니라더라도 국왕이 특별히 배려하여 관인에게 부의품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일정한 기준보다 많은 賻物을 받는 등의 우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賻儀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시중 겸 병부령이었던 김양이 죽자 문성왕은 김양을 서발한으로 추증하고, 김유신의 舊例를 따라 부의 · 장례를 행하라고 명하였다.<sup>96)</sup> 수량 · 수준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태대서발한이었던 김유신의 사례를 고려하여 김양의 喪家에 부의품을 주었을 것이다. 망자에 대한 관등의 추증이 보편적 사례는 아니지만, 신료의 상장례를 논의하면서 관등의 추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하나의 들판에서 맞이하여 시체 앞에 이르러 통곡하고 禮로써 殯葬을 치르게 하였다. 귀산에게 나마를, 추항에게 대사의 관등을 추증하였다.<sup>97)</sup> (『삼국사기』 권45, 열전5 귀산)

[무열]왕이 [관창에게] 급찬의 위계를 추증하고 예로서 장례를 지내고, 그 [喪]家に 당나라 비단 3십 필 · 20승포 3십 필과 곡식 1백 석을 내려 주었다.<sup>98)</sup> (『삼국사기』 권47, 열전7 관창)

602년(진평왕 24) 아막성 전투에서 귀산 · 추항이, 660년(무열왕 7)

95) 『唐令拾遺』 「喪葬令」 第32, 8조 · 14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8조는 관품에 따라 부의품의 종류 · 수량이 정해져 있고, 14조는 挽歌의 인원 · 장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96)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97) “王與羣臣 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 帶項大舍.”

98) “大王贈位級浪 以禮葬之 賻其家唐絹三十四 · 二十升布三十四 · 穀一百石.”

항산벌 전투에서 관창이 죽자 왕은 관등을 추증하였다. 왕은 예로써 망자의 장사를 치르도록 명하면서 관창의 喪家에는 비단·곡식 등을 내려 주었다. 중국 왕조에서 추증한 관인은 贈官을 기준으로 부의품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sup>99)</sup> 위의 사례도 추증된 관등을 기준으로 부의품이 정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도 관인이 상을 당하면 관청에서 부의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관등에 따라 喪葬器物·葬具의 종류·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왕조에서 부의는 오랜 전통으로, 漢代부터 국가가 관인에게 賻를 증여하는 기준이 세워졌다.<sup>100)</sup> 그리고 특정 관품에 대한 부의품의 종류·수량은 관례로 이루어지다가 唐代 체계적 규정으로 확립되었다.<sup>101)</sup> 마찬가지로 신라도 율령이 반포된 이후 부의는 습에 따라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sup>102)</sup> 망자의 관등을 추증하는 사례는 일찍이 마립간기부터 확인된다.

[눌지]대왕이 그 일[제상의 죽음]을 듣고 애통해하며 [나마 박제상을] 대야찬으로 추증하였고 그 가족에게는 후하게 물품을 내렸다.<sup>103)</sup>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

99) 『天聖令』 喪葬令 제29, <現 8>, “諸贈官物者 賻及供葬所須 並依贈官品給 若賻後得贈者 不合更給.” (김택민·하원수 주편, 『천성령 역주』, 혜안, 2013, 553쪽) 천성령은 북송 인종 천성 7년(1029)에 규정된 습으로, 이와 관련한 唐습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唐代에도 贈官을 正官과 같이 대우한다는 규정(『白居易集』 권69, 唐故湖州長城縣令贈戶部侍郎博陵崔氏府君神道碑銘并序, “又按喪葬令 凡諸贈官得同正官之制.”)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김택민·하원수 주편, 앞의 책, 2013, 553쪽).

100) 『二年律令』 賜律 283~284簡, “二千石吏不起病者 賜衣襦 棺及官衣常[裳] 郡尉 賜衣 棺及官常[裳] 千石至六百石吏死官者 居縣賜棺及官衣 五百石以下至丞 尉死官者 居縣賜棺.”

101) 중국 왕조의 賻賻制度에 대한 내용은 劉可維, 『中国古代賻賻制度研究』, 九州大学人文科学歴史空間論專攻 博士學位論文, 2015에 정리되었다.

102) 상복법, 순장의 금지, 賻物의 지급 등의 내용을 근거로 신라 율령의 편목에 喪葬令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李仁哲,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54, 1994, 155~156쪽).

103) “大王聞之哀慟 追贈大阿湌 厚賜其家.”

왕의 동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박제상이 사망하자 놀지마립간은 생전 남아있던 박제상의 관등을 대아찬으로 추증하였다. 이와 함께 제상의 가족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는데, 박제상의 상장례에 이용할 葬具·재화였을 것이다. 마립간기부터 사망한 인물에게 관등을 더해주기도 하였으며,<sup>104)</sup> 상장례에 쓰일 물품을 보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립간이 수여한 관등에 따라 부의품을 하사하면서 점차 관등은 국가(관청)에서 부의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갔을 것이다.

상복법이 특정 신분·지위에 맞는 의례 행위를 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분·관등은 상장례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의는 사망한 관인을 위한 배려였지만, 官給의 기준인 관등·신분은 망자·喪家가 이용할 수 있는 葬具의 종류·喪葬의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sup>105)</sup>

지증왕이 지배층의 상장례를 규제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아래 일본 왕조의 기록은 국가 차원에서 상장제도를 정비하였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갑신, 詔를 내려 명하였다. “...요즘 우리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오직 무덤을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제도를 정비하여 준비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스스로 목을 매서 죽거나, 목을 졸라 순사시키거나, 죽은 사람의 말을 억지로 죽이나, 죽은 사람을 위해 보물을 묘에 묻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머리털을 자르고 허벅지를 찌르며 조사를 바치는 것과 같은 옛 풍속을 모두 중단한다. 만일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족을 처벌 하겠다.”<sup>106)</sup> (『일본서기』 권25, 효덕 원년 3월 22일)

104) 5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위 관등을 추증하는 사례도 확인된다(『삼국사기』 권3, 신라 본기3 놀지마립간 17년, “十七年 夏五月 末斯欣卒 贈舒弗邯.”).

105) 『唐令拾遺』 「喪葬令」 第32, 12·13·18·20조에 관품에 따라 銘旌의 규격·輻車의 장식·墓田 지급·비갈의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다.

106) “甲申 詔曰...酒者 我民貧絕 專由營墓 爰陳其制 尊卑使別...凡人死亡之時 若經自殉 或絞人殉 及強殉亡人之馬 或爲亡人 藏寶於墓 或爲亡人 斷髮刺股而誅 如此舊俗 一皆悉斷 縱有違詔 犯所禁者 必罪其族.”

위의 내용은 646년(大化 2) 공포된 조칙으로, 소위 薄葬令이라 불린다. 조칙은 후장 관행을 비판하면서 묘주의 신분에 따라 무덤의 규모를 규제하고 순사·순장, 부장품의 공헌과 같은 舊俗을 금하였다. 葬墓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피장자의 신분·지위에 따라 무덤의 크기·봉토의 높이, 동원할 수 있는 역부의 수와 동원 기간, 喪葬器物的 종류를 차등적으로 규제하였다.<sup>107)</sup> 이러한 조치를 통해 효덕친왕은 상장례에서 준비, 즉 신분·지위를 구별하고자 하였다.<sup>108)</sup>

마찬가지로 지증왕은 상장례의 수준에 차등을 두어 지배층의 정치적 위계·신분 등급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복법의 규제 대상은 왕경 지배층에 한정되었을까. 앞서 503년 국호인 ‘신라’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상기하면, 지방민도 신라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09)</sup> 마립간기부터 지방 유력자는 왕경 지배층과 함께 왕의 장송 의례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왕경 지배층의 애도·추모 방식을 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10)</sup>

지방 유력자의 상장례에서 일정한 사회규제가 있었음은 5세기경 고고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신라의 복속지역도 적석목곽분의 요소

107) ‘爰陳其制 尊卑使別’ 구절에 이어 王以上, 上臣, 下臣, 大仁, 小仁, 大禮~小智, 庶民에 따라 석실의 길이·넓이·폭, 분구의 方形·높이, 役夫의 수와 무덤 축조 기간, 棺을 덮는 帷帳의 구분·輻輳의 이용 등을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上臣의 무덤에서 석실 규모는 왕 이상의 무덤과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지만, 분구의 크기는 작게 조성해야 했다. 그리고 왕 이상은 棺을 옮길 때 輻輳을 쓸 수 있지만, 上臣의 棺은 메고 가도록 했다. 大仁·小仁부터 무덤의 분구를 쌓을 수 없고, 서민은 무덤을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왕 이하는 殯을 둘 수 없게 하였다.

108) 林紀昭, 「大化薄葬令の再檢討」, 『論集 終末期古墳』, 塙書房, 1973, 430쪽; 高校照彦, 「律令期葬制の成立過程-「大化薄葬令」の再檢討を中心に-」, 『日本史研究』 55 9, 2008, 18쪽. 그리고 갑신조의 규정은 喪葬令으로 이어졌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林紀昭, 앞의 논문, 1973, 390쪽; 北康宏, 「大化2年3月甲申詔の葬制について」, 『續日本記研究』 310, 1997, 27~29쪽).

109) 상복법은 지방민에게도 적용되어 지방 통제방식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주보돈, 앞의 책, 1998, 80~81쪽).

110) 현지 유력자의 세력 크기·수준에 따라 마립간에게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남혜민, 「신라 마립간기의 지방 통제와 上守吏의 기원」, 『東方學志』 196, 2021, 225~230쪽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를 채용한 고층 고분이 축조되었는데,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재질·조합 및 수량은 경주와 지방, 지방간 位次를 보인다. 현지 유력자의 세력 규모·중요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현지 유력자의 역할에 따라 葬制에서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sup>111)</sup> 상복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방민은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위계에 따라 상장제의 규제를 따랐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sup>112)</sup>

‘신라’라는 국호의 확정, 범칭으로 쓰이던 왕호 사용의 제한, 관등 체계의 일원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증왕은 상복법을 제정·반행하였다. 그리고 상복법의 제정은 주군제의 시행·지방관의 파견, 외위제의 정비와 같은 지방지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증왕은 상장례를 정비하면서 왕경 귀족의 신분 서열·정치적 위계와 지방 세력의 등급·서열을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증왕은 상장례에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층의 신분 등급·정치적 위계를 구별·재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11) 황남대총 남분이 축조된 이후 경주 및 낙동강 이동지역의 고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복식품의 구성·수량 등을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34~163쪽; 李漢祥,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3(서울대 국사학과), 1995; 李熙濬,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 47, 2002;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76~81쪽·315쪽; 김용성, 앞의 책, 2015, 149~155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2) 지방 유력자의 상복·상장례 수준은 왕경 지배층의 신분적 기준을 활용하여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후대의 사례이지만, 흥덕왕 9년(834) 골품에 따라 복식·車騎·器用·屋舍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촌주는 각각 4·5품과 같다고 하였다[‘外眞村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 (『삼국사기』 권33, 잡지2 屋舍)]. 왕경 지배층의 신분 질서나 규제 기준을 지방민에게 적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이 글은 6세기 전반 지증왕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복법을 제정한 배경과 반행한 목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령의 지증왕은 前王의 상장의례를 주관하면서 상장 관행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짐작된다. 前王의 방계이자, 즉위 이전부터 집권 기반을 다졌던 지증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위 기간이 상장례를 정비하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증왕의 재위 시기는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던 시기였다. 6세기초 왕경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등 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민의 지위를 아우르는 위계 서열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때 제정된 상복법은 왕경 지배층과 지방 유력자 모두를 규제하는 제도적 규범이었다. 지증왕은 망자의 신분 등급·정치적 위계에 따라 상복의 수준·상장례의 규모를 차등적으로 규제하여 정치적 위계·신분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법흥왕 7년, 율령의 반포는 신라의 지배체제·지배 구조가 확립되는 계기였음이 틀림없다. 이 글은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부터 일원화된 관등 체계의 골격이 존재하였다고 파악하였으며, 지증왕대 제정된 상복법은 7세기까지 이어졌음을 밝혔다. 일원적 관등 체계와 상복법의 관계를 통해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여러 법과 율령의 관계, 율령의 성격을 규명할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지증왕에 관한 논의는 지증왕의 왕위계승과정이나 왕계의 변화, 주군제의 시행, 우산국의 정벌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증왕은 고령에 즉위하여 풍부한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통치체제의 정비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증왕대 이후 법흥왕~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지배체제의 정비는 지증왕의 직계 계승 뿐만 아니라 지증왕대 정치적 지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라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증왕 개인의 문제의식이나 정치적 지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三國史記』·『三國遺事』·『周書』·『隋書』·『北史』·『日本書紀』·『續日本記』.  
『唐令拾遺』(仁井田陞 著, 『唐令拾遺』, 東京大學 出版會, 1933).  
『律令』(井上光貞·席晃·土田直鎮·青木和夫, 『日本思想大系 3: 律令』, 岩波書店, 1977).  
『儀禮』 「喪服篇」 (김용천 역주, 『의례 역주 六: 상복』, 세창출판사, 2013).  
포항 냉수리 신라비·울진 봉평리 신라비.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홍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3.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2006.  
김용천·장동우, 『中國古代 喪服의 制度와 理念』, 동과서, 2007.  
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2008.  
김용성,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 稲田奈津子, 『日本古代の喪葬儀禮と律令制』, 吉川弘文館, 2015.
- 鄭求福,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權五榮,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2000.  
박성천, 「新羅 智證王의 卽位過程에 대한 研究」, 『慶州文化研究』 6, 2003.  
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와 외교」, 『韓國人物史研究』 2, 2004.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2008.  
洪承賢,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喪服禮의 확정 과정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2, 2008.  
조경철, 「백제 왕실의 3년상-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5, 2009.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韓國古代史研究』 65, 2012a.  
채미하, 「신라의 凶禮 수용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42, 2012b.

-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2018.
- 박초롱, 「지증왕 · 법흥왕대 왕실 상장례 변화와 그 의미-지증왕대 상복법 제정 · 반행(頒行)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62, 2019.
- 홍승우, 「지증왕대 喪服法과 律令」, 『歷史教育論集』 74, 2020.
- 남혜민, 「신라 마립간기의 지방 통제와 上守吏의 기원」, 『東方學志』 196, 2021.
- 이현주, 「신라 유교 가족윤리의 도입과 변용-상복법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59, 2021.
- 林紀昭, 「大化薄葬令の検討」, 『論集 終末期古墳』, 塙書房, 1973.
- 山下洋平, 「律令国家における臣下服喪儀礼の特質-唐制との比較を通して-」, 『史学雑誌』 121-4, 2012.
- 山下洋平, 「北魏文明太后崩御時における孝文帝の服喪儀禮」, 『東方學』 135, 2018.
- 劉可維, 「中国古代贈賻制度研究」, 九州大学 人文科学歴史空間論専攻 博士學位論文, 2015.

Abstract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Direction of the Rules of the Mourning clothing Law(喪服法) in King Jijeung's reign

Nam, Hye-min

The mourning clothing law enacted by King Jijeung is a courtesy law and norm for the mourning and funeral rituals. And King Jijeung enacted the mourning clothing law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The mourning clothing law stipulated one-year mourning for parents, wife and son, king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method and period of mourning were divided differentially.

At the beginning of the 6th century, the royal ruling class had a unified hierarchy with the king at the top. In addition, Silla government was recruiting local influential people as one ranking system while strengthening local governance.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king's authority and the confirmation of the national title, the mourning clothing law was a norm for the ruling class of the royal court and local influential people.

Prior to the legislation of the official rank system, King Jijeung found that the political hierarchy and status ratings of the ruling class were applied as regulatory standards for the mourning and funeral rituals. It can be understood that King Jijeung tried to confirm the hierarchy of the ruling class by making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mourning and funeral rituals.

**keywords :**

King Jijeung, the Mourning clothing Law(喪服法), mourning and funeral rituals, the ruling system, Hierarchy, the Government Officials Ranking System(官等制)